

“전북을 혁신당 승부처로”

강경숙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공식화… “제도약 이끌 것”
소통하는 도당·전북현안 주도 정책정당 등 4대 방향 발표
‘도당위원장 임기 내 전북 주권당원 1만 시대’ 목표도 제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뜨겁게, 전북을 새롭게, 강경숙이 힘 있게 뛰겠다”며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새로운 혁신의 비전을 일으켰지만 이제 다음 총선을 2년 남짓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의 조국혁신당 정당 득표율은 45%가 넘었

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당이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했고, 도청소재지인 전주에는 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며 “배우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는지, 왜 더 소통하며 눈을 맞추고 손을 붙잡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당의 혁신을 위해 △소통하는 도당 △전북 현안을 주도하는 정책정당 △조직을 키우는 도당 △교육에서도 실효 있는 도당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당원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의 주요 결정에도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참여하는 도

당, 함께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 지방의원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실을 연결하는 핫라인과 ‘정책 테이블’을 구축해 지역 현안을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북 현안 해결에 자신의 의정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강화 방안도 내놴다.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에 17명의 조국혁신당 지방의원이 탄생한 점을 기반으로 지역위원회와 당원, 지방의원 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발굴하고, 기존 지역위원회는 지역 현안을 가장 먼저 살피는 정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기 안에 ‘전북 주권 당원 1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 선정, 이차전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전북대·원광대 지원 확보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국립의전원 설치, 대학의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전북이 조국혁신당의 승부처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드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며 신뢰를 쌓겠다”며 “전북의 달 강경숙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경숙 의원의 이번 출마 선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전북도당의 조직적 한계를 인정하고 당원과 지역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해 2028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만호 기자



삼산마을 주민협의회 소속 송운선 회장과 회원 10여명은 13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 추진과 관련 “수개월째 기능이 마비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 추진방식 문제 있다”

삼산마을 주민들, 재정사업서 민간투자사업 방식 추진에 반발
“주민지원협의체 전원 해촉하고 신설 소각장 추진 중단하라”

삼산마을 주민들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장기 파행과 전주시의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산마을 주민협의회(회장 송운선) 소속 송운선 회장과 회원 10여명은 13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기능이 마비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들 사이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협의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추천 명단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위원을 선발했고, 전주시 역시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위촉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주민협의회는 기존 위원들이 주민 권익 보호와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역할보다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고소·고발에 치우쳤으며 대표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위원을 선출해 협의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체 파행으로 주민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주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환경 관련 사업 등도 제대로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지원금과 건강검진, 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협의체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추진하는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존 소각장으로 인해 장기간 악취와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전주시와 기존 부지 재건립을 전제로 실패를 쌓아왔는데 최근 시가 민선 9기 조지훈 시장 당선 후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 소각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인 만큼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환경·안전 관리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공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방식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주민들은 따르면 현재 삼산마을은 127가구가 구상돼 있으며 주민총회에서 99가구가 참석해 88가구가 기존 위원

전원 해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구서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과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절차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접수를 거쳐 시의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5일 협의체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경찰과 시청 직원 등이 대거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간 갈등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삼산마을 주민협의회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과 함께 시청 앞 장기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7월 30일 시장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모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일정이 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주시와 삼산마을 거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광역 소각장 건립 사업뿐 아니라 주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이 공개적인 대화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호기자



비른정치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 10여명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 도지사 제명 의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 지사 제명 의결 진실 규명하라”

비른정치 범도민대책회의

비른정치 범도민대책회의(상임대표 나춘균) 소속 회원 10여 명이 더불어 민주당의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명 의결 과정과 관련해 당시 지도부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 상임대표인 나춘균 상임대표와 박동순 위원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최고위 내부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자신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반과 반대의견이 존재했음에도 제명 결정이 만장일치였다고 발표했다면 이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된 것”이라며 “민주당원과 도민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오도한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최고위에 참여했던 전북 지역 인사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성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고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지원 의원 역시 당시 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국회에 입성했다”며 “두 의원은 당시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만장일치 결정이 실제 최고위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발표된 것인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당시 최고위원회 회의록과 의결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청대 전 대표가 밝힌 만장일치 결정이 실제 최고위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발표된 것인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당시 의결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연임과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며 “의결 과정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 연임과 재선을 논하는 것은 도민과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과 제명 의결 과정이나 발표가 실제로 왜곡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청대 전 민주당 당 대표와 이성운·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도 요구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의결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진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지원 최고위원 “도민 상처 이용한 정치공세 멈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을 겨냥해 전북도민의 아픔을 당내 전당대회에 이용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13일 지난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 기간 강득구 최고위원이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제명 당시 최고위원회 의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 아픔을 전당대회를 불쏘시개로 악용하려는 중앙정치권의 부적절한 행태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은 당내 경선에서 엄격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선배 최고위원들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형제화하고 선거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시 김 전 지사 제명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윤리감할단의 간할 결과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열렸으며, 법률적·정무적 검토 결과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수위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추가 구두 소명 기회 부여 여부도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당 대변인을 통해 만장일치 제명 결론이 발표됐다는 것이 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당시 강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이 다수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남겨달라고 요청했던 안건은 별도의 전북 관련 안건이었다며 “나 역시 전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이 입으신 아픔의 깊이를 알기에 그 상처를 다시 들춰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특자체 자율 합의를”

민주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소송전을 중단하고 자율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를 연기하고, 위원 중립 등 절차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한 건축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현안인 아니라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을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닌 국가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중분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직이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



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성급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국책사업의 차질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과 신항만 개항을 위한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지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이원화된 절차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6개월 이내 신속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분명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80%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현실화하고,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매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와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기자